

기문가야 논란? 공론화 필요

이정린 도의원, 오늘
도의회 5분 발언 예정
“가아사 연구, 미지의
영역 많은 연구분야”



셀이어서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계는 기문은 일본서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중국 문헌에서도 등장하고, 입니다 일본부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이 1일 열리는 제384회 도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문가야’ 용어 폐기 주장에 대해서 전북도가 공론화 과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기문가야’ 논란의 핵심은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기문이라는 명칭을 세계 유산등재 신청서상에 명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입니다 일본부서를 용인하는

이정린 의원은 “가아사 연구는 기본적으로 학자들의 뭇이지만, 이를 세계 유산으로 등재시키는 과정까지 학계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기문가야 논란이 민족적 정서상의 거부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정한 학술적 근거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배척하기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론화 과정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아사 연구는 학계에서도 아직 미지의 영역이 많이 남아 있는 연구분야로 알려져 있다”면서 “전북도가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인 ‘전북가야 역사 재정립 학술대회’에서 기문가야 논란도 함께 논의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계기로 전북가야사 복원사업에 관한 지역사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사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총 212인 중 찬성 139인, 반대 7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악질 범죄’ 난폭운전 처벌규정 신설

민주 신영대 의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법안’ 대표발의



이 경미하고, 처벌 건수도 오히려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보복성 난폭운전 건수는 지난 2017년 4,431건에서 2019년 5,546건으로 늘어난 반면, 기소율은 2017년 55%에서 2019년 44%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신 의원은 운전자와 자동차 등

을 이용해 앞지르기 위반, 신호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를 연발이 함으로써 타인을 위협하고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신영대 의원은 “난폭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악질적 범죄행위이므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안전을 제고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입법·제도적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원대한 꿈!
원광대에서 원대로 이루자!

2022학년도 수시모집
2021. 09. 10.(금) ~ 09. 14.(화)

2022학년도 정시모집
2021. 12. 30.(목) ~ 2022. 01. 03.(월)

2022학년도 신입생 특별혜택

- 통학 버스 무료
- 기술사 합격 보장
- 최초 합격자 50만원

전 노선 신입생 1년간 무료 (세종, 대전, 계룡, 논산, 전주, 군산, 김제, 정읍, 부안)
기술사 입사 희망 신입생 우선배정 (기술사 10개동, 3,737명 수용가능)
_2020대학정보공시)

상담 및 문의전화
학생부종합(의·한·영 포함) 063. 850. 5266
학생부교과(일반) / 정시모집 063. 850. 5262

원광대학교 WOKWANG UNIVERSITY

도의회 임시회 오늘 개회

재난지원금 등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의

전북도의회(의장 송진용)는 1일 제384회 임시회를 개회. 1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전북도 및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 한다.

당초 이번 회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 없었으나, 정부 5차 재난지원금 등 정부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도민에게 신속히 혜택을 주기 위해 긴급하게 회기를 조정했다.

최영일 부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관련은 타이밍이다”며 “코로나 19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의회는 꼼꼼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제384회 임시회는 1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처리한 안건을 최종 의결 처리하고 폐회된다. /유호상 기자

“비유전자변형 식재료 사용 확대 나서야”

박용근 도의원



전북도의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 장수)의원이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교육청은 어린 학생들에게 ‘유전자변형농수산물’(GMO)이 매우 유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후후 비유전자변형 식재료 사용을 더욱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일부 시·도교육청은 GMO 안전성 검사를 강화했고, GMO를 학교 급식 식재료에서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다”며 “전북교육청 또한 GMO 식재료 사용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근 의원은 “현재 도내 학생 수는 약 20만명인데 비해 비유전자변형 식재료 지원은 10%도 안되는 규모로 진행됐는데, 전북교육청이 GMO 식재료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후후에는 GMO의 위험성을 다방면에서 조토해 보고, 사업 규모의 확대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환경영향평가서 조작 실질적 규제

산림관리 현실화… 민주 윤준병 의원, 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에 대한 실질적 규제와 산림관리의 현실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나섰다.

윤 의원은 지난달 31일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한 사업자나 환경영향평가 업자의 경우, 처벌 처분 전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대행 계약에 한정해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기한을 제한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실제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의 대규모 벌목 또는 수

단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한 사업자나 환경영향평가 업자의 경우, 처벌 처분 전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대행 계약에 한정해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기한을 제한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실제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의 대규모 벌목 또는 수종 개량에 관한 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새롭게 포함으로서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해 효율적인 환경 보전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선관위, ‘아름다운 선거 희망메시지 공모전’ 개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소망과 다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아름다운 선거 희망메시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가 자격에 제한 없이 누구든지 전북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 받아 1인당 2건 이내로

1일부터 17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주제는 ▲ 모두가 함께하는 참여, 희망, 화합의 선거를 담은 메시지, ▲ 정책선거, 기부행위 없는 깨끗한 선거, 투표참여 등을 다짐하는 메시지 등이다. /유호상 기자

진안군의회 “보통재 터널화 사업 예타 탈락 유감”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에 국도 26호선 보통재 터널화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 진안군의회 김광수 의장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는 국도 26호선 보통재 터널화 사업이 지난 24일 기획재정부에서 개최한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일괄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전북도가 기재부에 신청한 12개 사업에 포함되었고, 국가균형발전과 안전성 및 정책성이 무게를 두고 심사하는 일괄예타의 성격에 부합하기에 진안군민들이 거는 기대가 컸다”며 “매번 경제성의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고배를 먹고 있는 현상이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번에도 위원회에서 경제성(B/C)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성의 논리보다는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사고 예방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대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안=우태만기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온혜상사(주)



대표전화 063)227-4610

NAVER

온혜상사(주)